

#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박 승 관(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1. 서 론

최근 국가정보화에 관한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적으로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비단 서구의 선진국가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 역시 이 문제에 관하여 선진국들에 못지 않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하나의 전세계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같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개념의 이면에는 디지털화된 정보 하부구조의 신속한 도입과 전세계적 정보 네트워크와의 연계의 구축이야말로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필수요건이라고 보는 신념이 놓여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경제적, 산업적, 재정적 기초의 부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첨단 정보테크놀러지의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의 국가 재정자원을 투입하면서 “정보사회”를 향한 전지구적 동경의 물결에 주저 없이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꿈, 즉 핵심적 기술 기반으로서의 현대적 국가 정보 하부구조를 건설함으로써 풍요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시급히 도약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문들에 봉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정보화 과정은 많은 경우 그다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첨단 정보 하부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종종 기대한 만큼의 정치사회적 혜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Park, 1990). 다시 말하면 정보 테크놀러지의 사회정치적 잠재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동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첨단의 정보 수단들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그것이 실용성을 가져올 조건과 상황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즉 정보 테크놀러지를 도입하는 데 단순히 몰입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혜택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화 프로젝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핵심 이슈의 하나는 정보 하부구조에 대한 공중의 보편적 접근 문제이다. 공중의 접근 문제는 정보 네트워크의 이용을 비차별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공중 일반에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Mansel, 1993). 이러한 생각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정보 환경에 공중의 평등한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고 있다.

보편적 접근의 문제를 국가의 정보화 과정에 일반 공중의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문제로 파악하면, 서구사회의 경험에서 유래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정보화에 관련된 정책 이슈에 관한 토론의 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일종의 편향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 개념은, 테크놀러지에의 접근 제공 자체에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술 결정론적 관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보편적 접근 개념은 그러므로 정보사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열쇠는 폭넓은 공중에게 정보 테크놀러지의 “접근”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을 은연중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험은 기술적 접근가능성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참여사회를 실현하는 길을 열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정보사회의 문제는 테크놀러지의 보급의 문제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비서구 사회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우리들의 정책적

관심을 특정 사회의 인간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관련된 포괄적 문제들에 투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한 사회의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들 요인들이 첨단 정보 하부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잠재력의 전면적 실현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1994년 정보통신부를 발족시킨 이후 다양한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그 정보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첨단 정보 테크놀러지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비서구사회의 맥락에서 디지털 정보 고속도로 이슈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적, 실제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 2. 정보부문의 탈구(Disarticulation of Information Sectors)

아민(Amin, 1982)과 에반스(Evans, 1979)는 경제적 종속이 주변부 사회들의 테크놀러지 구조, 사회적 조건, 전체 국가 경제에 “탈구(disarticulation)”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민(Amin)에 따르면, 주변부 경제는 종속에 의한 왜곡의 결과로 “자기중심적(autocentric)” 전체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경제부문들과 단위들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현상, 즉 탈구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경제의 각 부문들이 하나의 개별적 원자처럼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에 따라 하나의 경제분야의 활동이 다른 분야들에 대한 선도효과(leading effect)를 유발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탈구는 대부분 기초산업의 부재와 비생산 부문의 비개발로 특징지어지는 심각한 부문적 불균형과 접합의 상실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의 국가 정보 하부구조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심각한 탈구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박승관, 1991). 정보 하부구조의 어느 특정 부문

이 타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과대평가받게 되고, 그리하여 타부문들을 희생시킨 채 그 부문에 국가의 자원을 과잉투자하게 되면서 국가의 정보 하부구조의 발전 패턴에 구조적 격차와 왜곡된 불균등의 체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썬스맨(Sussman, 1988, p. 285)은 개발도상국의 정보 테크놀러지 도입이 “장기적이고 전사회적 혜택을 무시한 채, 주로 사회적 위신을 위한 것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개의 경우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국가 정보 하위구조에서 보다 높은 공공성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부문은 전반적인 미발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첨단의 컴퓨터화된 현대적 고가장비와 국제 위성통신 접속체제를 도입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국가 정보체계의 심각한 탈구를 유발하는 경향으로 쉽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첨단 엘리트 중심적이고 국제화된 정보부문은 과잉발전하는 데 반하여 보다 공공중심적이고 전통적이며 다수대중을 위한 정보 하위부문은 발전이 정체되는 불균등 성장 패턴을 유발하게 된다(박승관, 1990).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보화 과정 역시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가 첨단 정보부문에 대하여 엄청난 재정자원을 투자하여 국가 정보체계의 현대화 프로젝트에 몰입하여 온 반면(정보통신부, 1996a), 국가정보 하부구조 중 보다 공공성이 높은 부문의 발전에는 정책적 관심의 할애를 소홀히 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첨단 엘리트 정보부문에 대한 집중된 투자와 이에 대비되는 대중적 공공 부문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다. 먼저 전자의 발전 수준을 상징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한국전산원이 제시하고 있는 ‘1997년도 정보화지표’(한국전산원, 1997)를 검토할 수 있다. ‘정보화지표’는 <표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종의 종합지표로서, ‘정보설비지표’, ‘정보이용지표’, ‘정보화지원지표’라는 3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종합지표로서의 ‘정보화지표’와 그것의 여러 하위지표들 중 고도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을 측정하고 있는 ‘정보이용지표 II’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도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관한 자료는 한 국가의

〈표 1〉 정보화지표의 구성체계

정보화 지표	정보설비 지표	정보설비지표 I	100인당 전화회선수 100인당 PSDN 가입자수 100인당 ISDN 가입자수 1인당 전용선 매출액
		정보 설비 지표 II	통신기기, 정보기기 및 부품의 1인당 내수액 100인당 TV 보급대수
	정보이용 지표	정보이용지표 I (기본정보통신서비스)	100인당 국제전화이용시간 100인당 텔렉스 가입자수 100인당 팩스 대수
		정보이용지표 II (고도정보통신서비스)	1,000인당 인터넷 호스트수 100인당 셀룰러서비스 가입자수 100인당 Radio-paging서비스 가입자수 100인당 비디오텍스 가입자수 1인당 데이터전송 서비스 매출액 1인당 DB 매출액
	정보화 지원지표	정보화지원지표 I (정보통신관련 투자 및 결과)	1인당 통신관련투자액 100인당 논문발표수
		정보화지원지표 II (정보통신관련 인력)	100인당 통신서비스관련 종사자수 100인당 연구원수

\* 자료: 한국전산원(1997, pp. 764-766)

첨단의 현대적 정보하위부문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종합지표로서의 '정보화지표'의 국가별 비교는 〈표 2〉에서 볼 수 있다.

〈표 2〉는 한국의 1990년도와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88년부터 1995년까지의 '정보화지수'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정보화지수는 일종의 종합지표로서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설비지표, 정보이용지표, 정보화지원지표의 지수 및 각 항목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다(한국전산원, 1997, p. 768). 〈표 2〉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보화수

〈표 2〉 주요 국가들의 정보화지수(한국1990=100)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증가율 (%)
한국	70	86	100	123	159	249	391	742	40.2
미국	688	794	952	1,258	1,669	2,342	3,200	5,350	34.0
영국	567	610	645	693	899	1,317	1,756	3,263	28.4
독일	385	413	511	716	1,095	1,737	2,354	4,693	42.9
프랑스	938	1,085	1,203	1,331	1,568	1,890	2,270	3,019	18.2
일본	332	373	477	641	833	1,078	1,422	1,926	28.5
대만	145	163	182	212	264	334	430	555	21.2
싱가폴	569	645	738	850	1,053	1,272	1,703	2,400	22.8
홍콩	620	691	869	1,017	1,075	1,381	1,674	2,167	19.6
전체국가	460	519	618	800	1,080	1,546	2,105	3,557	33.9

\* 자료: 한국전산원(1997, p. 767)

준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의 그것에 비하여 아직은 후진적인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선진제국의 그것을 급속하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1989년부터 1995년 시기에 연평균 증가율 40.2%를 기록함으로써 독일을 제외한 어느나라보다도 급속한 정보화 추세를 보여주면서 선진제국과의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경제수준에서 비교가능한 대만과 견주어볼 때, 1988년의 경우 대만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 못미치던 한국의 정보화는 1995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대만을 추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은 첨단 현대적 정보부문에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집중적이고 선도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는 것이다.

첨단 엘리트적 정보부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고도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성장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정보이용지표 II'를 살펴보면(〈표 3〉 참조), 한국의 첨단 정보부문의 성장이 얼마나 급속도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다 극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 비록 지수 자체는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에 비하여 뒤지고 있지만,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88.0%의 획기적인 성장률

〈표 3〉 주요 국가별 정보이용지수 II (한국1990=100)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증가율 (%)
한국	37	56	100	192	331	809	1,392	3,056	88.0
미국	1,781	2,227	2,931	4,580	6,413	9,367	13,747	25,304	46.1
영국	741	858	1,027	1,266	2,091	3,542	5,382	8,954	42.8
독일	290	389	554	821	1,293	2,264	3,416	6,937	57.4
프랑스	3,415	4,098	4,559	4,992	5,460	6,082	6,903	8,327	13.6
일본	385	453	546	676	838	1,163	1,800	2,987	34.0
대만	147	187	249	377	586	949	1,383	1,944	44.6
싱가폴	733	923	1,156	1,628	2,217	3,022	4,644	7,520	39.5
홍콩	1,434	1,718	2,092	2,561	3,031	4,160	5,337	7,642	27.0
전체국가	875	1,089	1,426	2,157	3,074	4,643	6,905	12,679	46.5

\* 자료: 한국전산원(1997, p. 774)

을 기록함으로써 비교대상 국가 중 최고속의 급진적 발전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88년에는 지수 수준에서 비교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나, 1995년에 이르러서는 대만은 물론 일본마저 추월하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자료들은 한국이 적어도 첨단 엘리트 정보부문에 관하여서는 국가적 지원체제의 가동에 힘입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첨단 정보부문의 획기적 성장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보다 대중적이고 공공적인 비첨단 정보영역은 어떠한 발전수준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의 공공도서관 설비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은 다수대중의 무료접근을 이론적 전제로 하여 설립된 국가 공공 정보부문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Park, 1990).

결론적으로 한국의 공공 도서관 체제는 한국과 비슷한 경제적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도 형편없이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 한국은 1995년 12월 31일 현재 총인구 약 4,500만 명에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공공 도서관을 보유, 평균 인구 13만 7천명당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p. 23). 특히 수도 서울의 공공 도서관의 보급 수준은 더욱 저급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에

〈표 4〉 서울시와 세계 주요 도시의 공공 도서관 현황 비교

주요도시	도서 관수	장서수	인구	1관당 인구	1관당 장서수	연간 이용자수	연간 이용회수
서울(95)	25	2,849	10,550,821	439,583	0.27	9,626,710	0.91
런던(91)	386	19,114	6,889,900	17,849	2.77	59,668,686	8.66
파리	64	-	2,154,678	33,667	-	-	-
베를린(92)	270	25,985	3,465,748	12,836	7.50	27,914,538	8.05
로마(92)	34	-	2,829,003	83,206	-	722,824	0.26
시드니(87)	153	-	3,656,543	23,899	-	880,095	0.24
뉴욕	210	-	7,322,564	34,689	-	-	-
시카고(90)	87	5,740	2,783,726	31,997	2.06	1,667,011	-
디트로이트(90)	63	4,400	1,027,974	16,317	4.28	3,200,000	3.11
휴스턴(92)	36	-	1,635,827	45,440	-	-	-
L.A(84)	215	4,603	3,071,000	14,284	1.50	-	-
필라델피아(90)	54	3,375	1,585,577	29,363	2.13	4,200,000	2.65
도쿄(91)	194	26,269	8,129,377	41,904	3.23	37,143,259	4.57
요코하마(91)	17	3,044	3,250,887	191,229	0.94	5,770,424	1.78
오사카(93)	26	3,873	2,588,989	99,577	1.50	291,074	0.11
나고야(92)	16	3,188	2,162,007	135,125	1.47	6,767,143	3.13
베이징(91)	23	-	10,395,000	451,957	-	-	-
상하이(92)	31	16,420	12,893,700	415,926	1.27	7,590,000	0.59
타이페이(93)	33	2,192	2,653,245	80,401	0.83	6,525,293	2.46
싱가포르(93)	10	3,217	2,873,800	287,380	1.12	869,957	0.30
모스크바(91)	481	29,500	8,801,000	18,297	3.35	-	-

\*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p. 25, 표 3-2에서 재구성).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은 인구 1,005만명에 25개의 공공 도서관을 보유, 1관당 서비스 인구는 무려 44만명에 달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이러한 공공도서관 보급비율은 1관당 인구비율 2만명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런던, LA, 모스크바 등 서방 주요 도시들이나, 3만 내지 4만명 수준의 파리, 뉴욕 시카고,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후진적인 수준이다. 경제수준에서 우리나라와 비교가능한 대만의 타이페이나 싱가포르가 1관당 서비스 인구에서 20만명대인 데 비하면 서울의 공공도서관의 발달수준은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저급한



수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1관당 서비스 인구에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도시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정도이다. 1인당 GNP가 1만달러 수준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공공도서관 발달 수준은, 불과 1인당 GNP 457달러인 중국의 그것과 대등한 수준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정보부문 중 대중적 공공부문의 발전 수준은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1인당 장서수를 함께 고려하면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중국의 그것에 비하여서도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장서수에서도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열악한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1995년 현재 1인당 장서수 0.27권으로, 베를린 7.5권, 디트로이트 4.28권, 모스크바 3.35권, 도쿄 3.23권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대만의 타이페이 0.83권, 싱가포르 1.12권 등 아시아 NICS와 비교해서도 저급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이용률에서도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하여 중하위권의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후진성을 노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그 시설수준, 장서수, 1관당 서비스 인구, 이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세계 주요 대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발전수준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보화과정은 첨단 엘리트 부문의 기록적 성장과 여기에 대비되는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공공부문의 극심한 후진성이라는 전형적 탈구현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정보부문 사이의 이러한 놀랄만한 발전 수준의 격차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쟁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보다 기초적이고 공공성 높은 대중적 정보부문을 희생시키면서 첨단 엘리트적 정보부문에 대하여 주어지고 있는 과도한 정책적 투자는 기존의 정보빈자와 정보부자 사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중일반에게 보다 기초적이고 절실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방대한 자원을 고도로 선진화되고 국제화된 디지털 정보 하부구조의 건설에 집중투자하기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민중정보부문의 확충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탈구의 현상은 국가의 전반적 정보 하부구조의 다른 여러 차원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공 조직들의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의 수용 양식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대적 테크놀로지

가 그 조직이 본래 표방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기능을 위해서보다는 관료적, 행정적, 관리적 목적을 위하여 보다 널리, 보다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일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탈구의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에 새로 도입된 컴퓨터들이 사실은 행정 관리들에 의하여 독점된 채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별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한국에서 자주 관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부문의 탈구 문제는 매우 다양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탈구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첨단 기술의 디지털 정보 부문에 주어지고 있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정교한 정보 네트워크의 도입에 요구되는 방대한 자본투자는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재정자원의 해외의존과 그에 따르는 외환 부족과 대외부채의 심화를 가져오는 경우마저 많다(Park, 1990).

탈구 문제와 관련된 두 번째의 쟁점은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의 격차 확대라고 생각된다. 첨단의 컴퓨터화되고 국제화된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은 정보 부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향이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정보화의 추구는 최첨단의 엘리트적 테크놀러지의 과잉보급과 보다 기초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정보 하부구조의 저발달을 낳고, 그 결과 정보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은 전지구적 정보 하부구조에 쉽게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은 선진국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일방적 정보종속의 통로 역할에 머물고 말 가능성이 높다(Schiller, 1996). 이러한 가설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내부의 정보서비스 체계가 저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국내의 정보원보다는 외국의 정보원들을 찾아나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쉽게 현실화될 수 있다.

결국 탈구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정보 테크놀러지에 주어지는 최고의 정책적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정보사회의 꿈속에 담긴 사회경제적 결과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3. 위로부터의 네트워크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 관한 낙관적 꿈은 디지털 정보 고속도로가 참여 민주주의의 촉진을 위한 기술적 하부구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또 다른 부푼 꿈으로 쉽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꿈은 보통 첨단 정보 테크놀러지가 대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주적 공공영역의 초석으로 봉사할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정보 테크놀러지가 국민들의 목소리, 특히 정보빈자들의 목소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질 높은 정보와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시민들의 공공 토론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정보화의 시대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중의 보다 효율적인 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종류의 기술 결정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낙관적 의견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적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은 먼저 전통적인 권위주의 정치문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영민(1996b)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어 온 권위주의적 정치 전통에 의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치적 토론 문화가 질식된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사회에서와는 달리 온라인 정보 네트워크의 기술적 도입만으로는 참여적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실제로 이용하는 방식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합리적 공공 토론 문화의 미발달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영민, 1996a).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비정치적이고 비공공적 목적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개설된 공공 문제에 관한 토론방들은 대규모의 공중의 참여를 동원해 내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심지어 이들 토론방 안에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의견이나 생각의 활발한 제시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물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5; 한상진, 1996). 가령 한국정보문화센터

〈표 5〉 한국의 PC 통신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이용 서비스

서비스명	선호도(%)
공개자료실	34.0
동호회/포럼	25.3
게시판/정보광장	11.7
정보검색서비스	9.8
채팅(대화방)	6.6
전자우편	5.1
인터넷(해외서비스)	2.3
주문/예약 서비스	1.2
여론광장	1.0
온라인게임	0.7
기타	2.3

\*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1995, p. 27).

(1995)의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두 가지를 고르도록 요구한 설문에 대하여 한국의 PC 통신 이용자들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PC통신 이용자들의 경우 공개자료실(34%), 동호회/포럼(25.3%), 게시판/정보광장(11.7%) 서비스의 이용률은 매우 높으나, 여론광장(1.0%)에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동호회/포럼을 선호하는 25.3%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그들 중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극히 미세한 수준에 머물고, 동호회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대종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표 5〉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PC통신 이용자들의 이용행태가 사교적, 정보적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치적 동기에 치중되어 있으며, 정치적이고 참여적인 이용방식은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국내 PC 통신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외국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는 듯하다. 그러나 힐스와 휴즈(Hills & Hughes, 1997)의 조사를 검토하면, 외국의 경우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비하여 정치적 토론과 의사교환에서

상대적으로 능동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수단들을 통하여 정치적 공동체의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USENET이라는 인터넷 상의 게시판을 통하여 방대한 양의 정치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적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PC통신이나 웹사이트들에 개설되어 있는 각종의 토론방이나 자유발언장은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운영마저 체계적이지 못하여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로 어떻게 수렴되고 수용되는지조차 불분명한 채 공허한 독백의 산실로 빈곤화되어 있다(이유진, 1997). 이러한 사실들이 제시하고 있는 바는 우리사회에서는 정보 네트워크에 의하여 생성되는 공공영역마저도 사람들의 공적 목소리를 동원해 내는 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 오랜 전통으로 정착되어온 침묵의 사회문화와 합리적 토론 문화의 미발달로 인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기술적 가능성의 실현이 억압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공적 목소리의 동원을 이처럼 실패하게 만드는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정부주도의 중앙집중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보화 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정보화는 주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0년까지 고도정보화사회에의 진입을 목표로 3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주도적 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정부의 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물론, 경제사회 구조의 정보집약적 구조로의 전환, 각종의 법령과 제도의 정비와 기술인력의 개발지원을 통한 민간부문의 정보화 지원, 정보통신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를 포괄하는 등 사회전반을 망라하는 정보화 추진계획을 담은 포괄적인 것이 되고 있다(정보통신부, 1996a, 1966b; 정보통신부, 1997; 한국전산원, 1995).

이러한 국가주도적 정보화 과정은 정부에 의하여 시민사회에 강제되다시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로부터의 네트워킹” 방식을(운영민, 1996a)을 도입하였다. 한국의 중앙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이러한 위로부터의 네트워킹 전략은 국가 정보 하부구조로 하여금 시민 사회의 정보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였다.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의 정보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공공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제시를 유도하도록 주의깊게 설계된 정보서비스들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공공 기관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책 정보는 양과 질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공공 기관에 의하여 공표된 정보마저도 공중을 위한 참된 정보 서비스보다는 정책의 선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보다 빈번하다.

“위로부터의 네트워킹” 원리는 한국의 ‘지역사회 전산망’(community network)의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고도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10대 과제”(정보통신부, 1997)에는 그 중점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역사회 전산망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지원 하에 전국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의 각 지역별 지역정보센터들과 내무부 주도의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중심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적 “위로부터의 네트워킹” 방식은 지역사회 전산망이 주민 중심의 참여적 운영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심각한 구조적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즉, 참여적 민주사회를 그리는 정보사회론의 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기구, 특히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통적으로 대민봉사기구라기보다는 정치적 통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우려를 낳게 한다. 정부주도적 “위로부터의 네트워킹” 방식이 주민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정보주체성을 바탕으로 민의의 효율적 수렴과 유통을 담보하는 참여적 정보체제를 생산해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네트워킹 방식은 지역사회 전산망을 통한 지역관련 정보활용의 활성화를 막는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기 쉬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지역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는 그것이 지역별 시민운동과의 적극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류승호, 1997).

이유진(1997)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PC통신과 인터넷을 위시하여 다양한 정보 테크놀러지를 이용하여 시도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험은 그 수준이 매우 초보적일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형성되는 정보유통체계가 민주주의적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민주주의의 실험은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 주체와 커뮤니케이션 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편중적이다. 즉, 우리나라의 정치관련 웹사이트나 PC통신 메뉴는 주로 홍보·

선전 자료나 정치관련 시사·보도 자료, 정부부처의 행정정보, 안내·공지 사항 등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하여, 정책쟁점에 관한 진지하고 활발한 의견의 교환과 토론이나 이를 매개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이곳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웹사이트에 개진된 의견들도 대안제시 위주의 진지한 참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의 감정적 표현과 화풀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반하여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양방향성 토론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용자 상호간의 토론, 의견의 교환이나 수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웹사이트 역시 민의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결집, 매개하여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정치적 요구의 적극적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오락물에 대한 수동적 소비자로서 머물고 말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PC통신 이용자 중에서 정보나 파일을 공개하는 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용자는 15.8%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하여 정보나 파일을 받아보는 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용자는 84.2%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한국정보문화센터, 1995, p. 35) 역시 이처럼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나타내는 수직적 하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보화과정은 수직적 하향성을 근간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네트워킹”을 기본특성으로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Bertelsen(1992, p. 326)이 지적하듯이, 민주주의는 단순한 통치와 의사결정의 체제가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는 능동적 참여에 기초한 하나의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보화는 정치조직의 선전활동을 위하여 “위로부터” 국민에게 수직적이고 하향적으로 투하되는 홍보물 위주의 정보체계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주도되면서 “아래로부터의” 참여적이고 상향적인 정보체계를 생산하는 미완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매개로 하여 성립되는 수평적인 정보생산, 유통체계를 건설하고 활성화하는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다.

#### 4.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와 커뮤니케이션 폐쇄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수평적 본질에 관하여 숙고하게 한다. 체리(Cherry, 1978)에 따르면 이 개념은 나누어 가진다는 뜻을 가진 “communico”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것을 공유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는 그 정의 자체에 이미 하나의 양방향적 상호작용과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근대적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시장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적으로 표명되고 자유롭게 대립함으로써 마침내는 참되고 합리적인 공중의 의지의 형성을 낳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Mill, 1975; Milton, 1951; Siebert, Peterson, & Schramm, 1956). 근대적 민주주의의 본질은 따라서 대립되는 견해들 사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의 활성화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테네에서 실현된 고전적 민주주의의 본질은 공적 쟁점에 관한 열린 토론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 사이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야말로 이들 사회집단들을 “민주적으로 조직된 공중”(Dewey, 1927, p. 147)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

인간 커뮤니케이션 개념의 본래의 이상이 다양하고 때로는 상호 경쟁하는 사회집단들과 의미체계들 사이의 수평적 교환에 있다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현실들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의 건강한 기초는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communication endogamy)와는 대립되는 “커뮤니케이션 엑소가미”(communication exogamy)의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다(박승관, 1996). “커뮤니케이션 엑소가미”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건 간에 특정한 사회적 경계들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말



하며,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는 그러한 사회적 경계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칭한다. 전자는 전형적인 양방향적이고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인 반면, 후자는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칭한다.

이들 두 가지 개념들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커뮤니케이션 엑소가미에 비하여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를 현상학적으로 검토하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고립되고 폐쇄된 커뮤니케이션 회로들의 집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폐쇄된 회로들은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개체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상호 고립된 폐쇄적 회로들을 가로지르는 효과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엔도가미적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단위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의 기능적 붕괴를 함축한다. 자율적인 사회적 단위들 사이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에 의하여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폐쇄(communication closure)” (박승관, 1994, 1996)의 폐해는 사회의 각 부분들을 목적지향적으로 협동하는 전체로 결합시키고 연결지우는 바람직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계적인 수직구조에 의하여 개방적인 수평적 구조가 억압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다원적 현실과 세계들 사이의 평등한 수평적 교류와 이를 통한 통합적이고 소통적인 대우주의 건설이 어렵기 때문이다(박승관, 1993).

이러한 결과로서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는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정보하부구조의 기술적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대적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부문들과 정부 조직들 사이의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흐름이 효과적으로 촉진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 사이의 정보의 교환과 공유에 기초한 상호협력의 가능성은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바뀔 가능성은 많다. 가령 윤영민(1997)의 지적처럼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제기구로서의 성격 때문에 높은 수준

의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나 정보를 많이 보유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내무부 등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지역전산 정보망에서 정보공유보다는 정보독점, 또는 정보보안을 지배적 관행으로 정착시킬 우려가 높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정부주도적 지역사회 전산망들이 정보개방과 위민봉사를 기본원리로 삼아 주민들의 입장과 요구에 순응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윤영민(1997, pp. 58-60)이 설명하고 있는 바 한국의 지역정보화 정책모형이 가지는 기본특성 역시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에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엔도가미적 커뮤니케이션 질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하는 특징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분절적인 정책집행이다. 지역사회정보화 정책의 하위정책들, 가령 문화정책, 교육정책, 단말기 보급정책, 전산망정책 등이 각각 별개의 것인양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성안되고 집행되면서 중간변수와 정책목표달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망적으로 가정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보화정책의 추진주체, 수단, 하위 목표들이 하나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엔도가미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지역전산망 정책에서도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한국에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참여 패턴은 동호회의 경우와 공공문제에 관한 토론방의 경우에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전자에 대한 활발한 참여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상진, 1996; 한국정보문화센터, 1995). 또한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인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들 사이의 연계체제 역시 극히 저조한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다(정보통신부, 1996b). 이러한 현상들도 개별적 주체들이 그들 사이의 원활한 상호소통을 매개로하여 통합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조직과 집단 사이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정보 흐름은 그것들의 이기적 분과주의와 기타의 관성화된 폐쇄지향적 행위들로 말미암아 활성화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적 컴퓨터 정보 체제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그것의 내재적 특성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커뮤니

케이션 구조와 연동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 테크놀러지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정보정책에서 테크놀러지 이외의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5. 결 론

한국의 정보화의 길이 가져온 결과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정보 사회의 꿈이 테크놀러지적 가능성 하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잠재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테크놀러지 측면 이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요인과 기타의 상황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이 논문은 정보 테크놀러지에 내재된 기술적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의 사회정치적 요인들을 보다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실천적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같은 비기술적 요인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다차원적인 정보접근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기술적 장벽들은 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처럼 한 나라의 정보 부문들은 그것들 사이에 심각한 탈구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단 정보부문은 보다 기초적이고 공공성을 띠는 정보부문들과 쉽사리 “네트워킹” 되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현대적 정보체제에 대한 정보빈자들의 보편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초를 훼손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정보 고속도로가 만일 “정보국도”나 심지어 “정보 오솔길”들에 의하여 보완되고 이것들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킹” 되지 않는 한 공중을 위하여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한 사회의 기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부문, 이익, 목소리, 그리고 전망들이 적절하게 네트워킹되거나 매개되지 못한다. 정치적 요인들 역시 정보 고속도로의 형성과 이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비기술적 요인들이 행사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정보화 추구 프로젝트는 한 사회의 반민주주의적 사회정치적 상황을 개편하기 위한 전면적 계획과 역동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수직적 하향성을 기본속성으로 깔고 있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상향성과 수평성을 근간으로 하는 참여적이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제로 재편해 내는, 보다 보편적이고 광범위하며 근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민주화의 관점에서 정보화의 문제를 조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정보화 프로젝트는 한 사회의 권위주의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전면적 개편 전망과 관련하여 이해되고 추진될 수 있을 때에만 인간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보다 순응적인 정보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접근 가능성의 부여만으로는 그것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이론적, 실천적 관심을 효율적 네트워킹의 문제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 고속도로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부문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개방적이며 상호적이고 민주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소통의 마당을 건설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Reference〉

- 류승호(1997).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정보화정책의 방향. 『동향과 전망』 1997년 겨울호(통권 제36호), pp. 227-250.
- 박승관(1991). 제3세계 정보부문의 탈구현상.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 제28집, pp. 43-64.
- 박승관(1993). 한국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붕괴.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 제30집, pp. 87-122.
- 박승관(1994).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서울: 전예원. 박승관(1996). 한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 『한국언론학보』 제36호, pp. 5-7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지역 정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원.
- 윤영민(1996a). 『전자 정보 공간론』 서울: 전예원.
- 윤영민(1996b). 전자정부의 구상과 실천에 관한 비판적 접근. 『국가기간 전산망 저널』 제3권 제3호, pp. 3-12.
- 윤영민(1997).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와 지자체를 연계한 지역정보화의 활성화 방안. 『'97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 (정보화추진협의회 주최) 발표논문. pp. 43-75.
- 이유진(1997).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pp. 141-164.
- 정보통신부(1996a).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1996b).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1997).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정보통신부.
- 한국전산원(1995). 『국가 정보화 백서』 한국전산원.
- 한국전산원(1997). 『국가 정보화 백서』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문화센터(1992). 『지역사회 정보화 실태 및 수요조사 종합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국정보문화센터(1995). 『PC 통신 이용자 행태 및 태도 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상진(1996). 지역사회 정보망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과 과제.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현대사회』 (한국사회학회). pp. 100-114.

- Amin, S.(1982). The disarticulation of economy within "developing societies." In H. Alavi & T. Shanin (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developing societies"* (pp. 205-209). New York, NY: Monthly Review Press.
- Bertelsen, D. A.(1992). Media form and government: Democracy as an archetypal image in the electronic age. *Communication Quarterly*, Vol. 40, No. 4, 325-337.
- Cherry, C.(1978). *On human communication: A review, a survey, and a criticism*. 3rd ed. Cambridge, MA: MIT Press.
- Dewey, J.(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Athens, OH: Swallow Press.
- Evans, P. B.(1979). *Dependent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Hills, K. A. & J. E. Hughes,(1997). Computer-mediated political communication: The USENET and political communities. *Political Communication*, Vol. 14, 3-27.
- Mansell, R.(1993). *The new telecommunications: A political economy of network evolution*. London: Sage.
- Mill, J. S.(1975). *On liberty*. New York, NY: Norton & Co.
- Milton, J.(1951). *Areopagitica*. New York, NY: Appleton-Century-Crofts.
- Park, S. G.(1990). *The role of the world-system and 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the informatization of developing nations*.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Schiller, H. I.(1996). *Information inequality: The deepening social crisis in America*. New York, NY: Routledge.
- Siebert, F. S., Peterson, T., & Schramm, W.(1956).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IL: Univ. of Illinois Press.
- Sussman(1988).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the ASEAN reg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In V. Mosco & J. Wask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pp. 274-296). Madison, WI: The Univ. of Wisconsin Press.